

한국 FTA정책의 虛와 實 A Critical Assessment of Korea's FTA Policy

南宗鉉

(세계경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 고려대 교수)

세계는 지금 FTA 열병을 앓고 있다. WTO의 가장 핵심규정인 GATT의 제 1조가 『무차별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FTA를 비롯한 갖가지 형태의 특혜무역협정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발효 중에 있는 특혜무역협정은 190여개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중 절반이상이 1995년 WTO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서로 생겨난 것이다. 그 결과, 현재 세계무역의 50%이상이 각종 지역적 특혜무역협정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에 불참하고 있는 국가들은 실질적 피해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FTA 열풍에서 벗어나 WTO의 다자간 틀 안에서 독자적인 무역정책을 추구하였던 동아시아 국가들도 드디어 최근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일본은 지난 2002년 1월 싱가포르와 자유무역과 경제협력을 골자로 하는 경제연계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타결하였으며, 최근에는 멕시코와도 정부간 FTA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중국도 2002년 11월 ASEAN국가와 2010년을 최종시한으로 FTA 협상을 추진하기로 기본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또 한·중·일 3국간 FTA 검토를 공식적으로 제안하여 현재 2005년을 목표로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2002년 10월 칠레와 합의를 본 자유무역협정이 오랜 진통 끝에 지난 2월 국회의 비준을 얻어 4월 1일 발효에 들어갔다. 그리고 올해에는 일본 및 싱가포르와 정부간 FTA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한국의 FTA정책은 과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 만약 아니라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 또 한국 무역정책의 우선순위 면에서 볼 때, FTA정책이 차지할 위치는 어디쯤일까?

한국의 FTA 정책을 평가하기 이전에 왜 FTA 시도가 세계도처에서 그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론 WTO차원에서 진행되는 다자간 협상에 대한 불만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46개에 달하는 회원국 전체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다자간 협상은 어디까지나 그 협상의 범위, 깊이, 그리고 속도 면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소수의 국가간에라도 먼저 신속하고 깊은 경제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동시에 과거 EU가 그러했듯이 역외 국가들에 대해서도 빠른 속도로 무역장벽을 완화해 나간다면 그것은 자국의 이익증진은 물론 다자간 무역체제에도 도움이 된다(WTO-plus)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이유로 소위 투자전환효과를 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FTA를 통해서 역내 국가들의 해외투자를 역내국가로 유인할 수도 있고 또 무역상 역차별을 당하는 역외 국가들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역내 국가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강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EU 주변국들이 바로 그런 이유로 EU와 FTA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 또 다른 이유로 FTA를 국내정책을 개혁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특정국가의 시장접근에 대한 일종의 보협효과를 노리는 경우가 있다. 멕시코가 NAFTA를 추진한 배경에도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특정국가와의 FTA를 통해서 차후 역외국가에 대한 협상력을 증대시키거나 또는 역내국가간의 안보유대를 강화하는 등 경제외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다. ASEAN이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나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최근 한국정부가 취하고 있는 최근의 FTA정책을 그 이해득실 면에서 평가해 보기로 하자.

우선 최근 발효에 들어간 한·칠레간 FTA를 보면, 해로울 것은 없으나 그리 큰 경제적 이익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표면적으로 볼 때, 칠레는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한국과는 매우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또 모든 수입품목에 6%의 단일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한국보다는 훨씬 더 선진화 된 무역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다른 나라와 FTA를 맺을 경우 무역전환효과보다는 무역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런 이유로 칠레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들과 FTA를 맺고 있으며, 그 대상국가로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EU 등 선진국은 물론 수많은 중·남미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다.

칠레는 그러나 지리적으로 볼 때, 지구상에서 한국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무역장벽”이 가장 큰 나라이고, 또 경제규모도 한국의 7분의 1정도에 불과하며 1인당 국민소득도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개발도상국이다. 2003년도 한국의 대 칠레 수출은 약 5억 달러, 수입은 1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품으로는 동피, 동광석, 펄프 등이 대략 총 수입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돼지고기, 과일류 등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5% 미만이다. 한국의 수출품은 거의가 자동차, 휴대폰 등 전자제품,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 등 공산품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국과 칠레가 자유무역을 완벽하게 실천에 옮겼을 경우, 수출증가는 연간 5억 4천만 달러 그리고 수입증가는 2억 2천만 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 GDP는 무

시할 정도로 적은 0.01%의 증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03년도 한국의 총 수출액이 1,940억 달러, 총 수입이 1,790억 달러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협상에 그렇게 국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었는지 의심이 갈 정도이다. 더구나 한국정부는 칠레 농산물 수입품 중 쌀, 사과, 배는 개방 예외 품목으로, 그리고 포도는 성수기인 5~10월간에는 개방을 금지하는 품목으로 정하는데 성공함으로써 그리 많지 않을 경제적 이익도 축소될 것이 예상된다. 물론 농가 피해도 크게 감소하여 향후 10년간 과수농가 피해액은 3~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피해농민의 집단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오는 2010년까지 1조 2천억 원의 FTA기금을 포함하여 총 1조 5천억 원의 농가지원을 약속하고서야 국회비준을 얻어 낼 수 있었다. 과도한 지원의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셈이다.

따라서 한·칠레 FTA는 당장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 것이라기보다는 향후 잠재시장규모가 큰 남미대륙과의 교역확대를 위하여 하나의 전초기지를 확보하고, 또 FTA의 운용을 통한 학습 효과를 얻음으로써 앞으로 더 큰 시도를 해 보려는 전략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싱가포르 FTA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 실속 있는 FTA로 보이지는 않는다. 싱가포르는 2002년도 현재 인구 4,2백만에 1인당 GDP가 2만 1천 달러가 되는 조그만 선진국형 국가로서 중계무역을 주로 하는 자유무역항 경제이다. 같은 해 총 수출은 1,270억 달러, 총 수입은 1,13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중 절반가량이 중계무역의 형태를 띠고 있다. 같은 해 한국과의 무역규모를 보면 한국의 수출이 42억 달러, 수입이 3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국토면적이 서울과 비슷하고 물까지도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니 농업이 있을 수 없다. 또 싱가포르는 관세가 거의 없는 자유무역항이니 다른 나라와 FTA를 해도 국내 시장에는 별 영향이 없고, 대신에 수출증가, 투자유치 등 상대국으로부터 얻는 것은 많기 때문에 FTA에 매우 적극적이다. 이미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 일본과는 FTA가 시행중에 있으며, 또 캐나다, 인도, 멕시코, 한국과는 현재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한국이 싱가포르를 FTA 대상국으로 선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도 역시 당장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앞으로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ASEAN지역과의 교역확대를 염두에 둔 하나의 전략적 접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한·싱가포르 교역 규모가 한국의 전체 교역량 중 2%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로부터의 수입증가도 국내산업에 큰 위협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과 농업부문에서의 국내저항이 없을 것이라는 점도 한·싱가포르 FTA의 주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한국이 칠레 및 싱가포르와 FTA를 맺음으로써 당장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비록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들 국가로부터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은 무역자유화를 이룩한 국가들이 국제적으로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를 이들 국가들은 생

생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와 칠레는 그 동안 WTO차원에서의 다자간 협상결과로 얻어지는 무역자유화 혜택을 충분히 누려왔을 뿐 아니라 이에 더하여 미국, EU 등 수많은 국가들과 FTA를 추진함으로써 이미 세계경제의 80%이상과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무역을 실현시키고 그 과실을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의 FTA는 그러나, 한·칠레 또는 한·싱가포르 FTA에서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심각할 수도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당국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일 양국정부가 이미 2005년을 FTA체결 목표연도로 정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협상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것이 때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지금이라도 정책당국이 좀더 균형잡힌 시각을 갖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한·일 FTA와 관련하여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 재조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한·일 FTA가 갖다 줄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고, 다른 하나는 한·일 FTA가 앞으로 한·중 관계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갖게 될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끝으로 한·미 관계에 미칠 파급효과와 아울러 그 대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그것이다.

일본의 인구는 한국의 2.6배에 불과하나 경제규모는 9배에 달하는 세계 제 2의 경제대국이고 제조업 경쟁력은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한다. 공산품의 평균 관세율도 3% 정도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농산물에 대한 보호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주식인 쌀에 대한 관세율은 500%에 달한다. 또 불합리한 유통구조 등을 통한 비관세 장벽이 높아 선진국 중 국내가격이 국제가격으로부터 가장 심하게 왜곡되어 있는 경제이기도 하다. 즉, 세계은행의 추정에 의하면 2002년도 경상가격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4천 달러이나 이를 구매력평가기준(즉, 미국가격)으로 환산하면 2만 6천 달러가 되어 약 23%정도 가격 인플레이를 안고 있다. 일본 경제의 폐쇄성은 무역규모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2003년 일본의 총수입은 3천 8백억 달러인데 비해 같은 해 경제규모가 일본의 3.5분의 1정도 밖에 안되는 중국의 총수입은 4천 1백 달러를 넘고 있다. 2003년도 한국과의 무역규모를 보면 한국의 대 일본 수출은 170억 달러, 수입은 360억 달러로 19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일 FTA가 양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여러 연구결과를 보면, 양국 모두에 별로 큰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측의 KIEP는 한국의 GDP가 약간 감소(-0.07%)하고 일본은 약간 상승(0.04%)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비해, 일본측의 IDE(아시아 경제연구소)가 추정 한 결과를 보면 일본의 GDP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반면에 한국의 GDP는 약간(0.3%)의 긍정적 효과를 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KIEP는 한국의 대 일본 무역수지가 61억 달러 정도 더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비해 IDE는 한국의 적자폭이 37억 달러 정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예상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국과 일본의 제조업 부문은 격차는 있

으나 이미 선진국 수준의 낮은 관세율을 갖고 있고 또 농업부문은 양국 모두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보호장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 경제구조는 보완적이라기보다는 경쟁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조업 부문에서 수입기준 한국의 관세율이 일본의 그것보다 세배 정도 (7.9% 대 2.5%) 높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규모가 한국의 9배에 달하지만 자유무역을 할 경우 일본의 한국시장 잠식이 한국의 일본시장 잠식보다 더 클 수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일본이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비관세 장벽이 제거되지 않는 한 한국기업의 일본시장침투는 그 만큼 더 어려울 것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한·일 FTA를 통해서 한국 농수산업은 어느 정도 무역혜택을 입을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무역전환효과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두 나라 경제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한국의 농업부문은 착시현상을 일으켜 세계적으로 볼 때 비교열위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비효율적 산업에 자원을 더 오래 묶어 둬으로써 차후 구조조정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 두 나라 농업부문이 국제무대에서 공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다자간 회담에도 더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련 경제학자들과 정부관계자들은 한·일 FTA는 궁극적으로 경쟁의 심화, 자본이동의 촉진, 제도의 개선, 그리고 산업구조조정 등을 가져와 양국의 산업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사양산업의 이전은 물론 첨단기술의 이전까지도 기대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 기대가 얼마나 현실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예컨대, 일본으로부터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는 직접투자(FDI)는 한·일 FTA 보다는 국내의 일반적 투자환경개선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아직 스크린 쿼터 문제 하나 해결을 못함으로써 미국과의 쌍무적 투자협정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아무튼 이상과 같은 동태적 경제효과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양국정부 모두 농업부문의 저항 압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이 현재 한·일 FTA를 추진하고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불투명한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한국은 한·일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많이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과의 관계이다. 최근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서 부상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과 무역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3년간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180억 달러 수준에서 350억 달러로 증가하였는데 비해 대 일본 수출은 200억 달러에서 170억 달러로 감소하였고, 2003년에는 대 중국 수출이 대 미국 수출 340억 달러를 상회하여 한국 제 1의 수출대상국이 되었으며 앞으로 그 격차는 급속도로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2003년 한국은 중국과 미국에 대해 각각 132억 달러와 94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거둔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19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현재 1

인당 국민소득이 1천 달러밖에 안되는 저개발국가이지만 부존자원과 산업구조면에서 한국과는 경쟁적이기 보다는 보완적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한국의 FTA 상대로 고려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경제적 측면만 고려해 본다면 동아시아에서는 한·중·일 FTA가 한국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그 다음이 한·중, 그리고 한·일의 순서가 될 것이다. KIEP도 한·중·일 FTA의 경우, 한국의 GDP는 1.27% 증가하는데 비해 일본은 0.23%, 그리고 중국은 0.11%의 증가에 그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만약 한·중·일 FTA가 성사된다면, 그것은 인구 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규모면에서도 EU나 NAFTA에 버금가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권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장에는 실현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본과 중국이 경제발전수준에서 너무나 격차가 커서 두 나라가 FTA를 할 경우 농업부분을 포함해서 극단적인 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될 뿐 아니라 두 나라간의 제도적 차이, 역사적인 대립의식 그리고 신뢰성 결여 등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중·일 FTA는 매력적이긴 하나 중·장기적 과제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일본과는 달리 한국의 의지에 따라서는 중국과의 FTA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농업부문에서 적당한 선에서의 절충이 가능하리라 보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정부가 일본과의 FTA를 심각하게 추진한다면, 중국과의 FTA도 동시에 추진해 보는 것이 매우 현명할 일일 것이다. 현재 대로라면 한국은 일본과 그리고 중국은 ASEAN과 먼저 FTA를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차후 중국이 한·일 FTA에 참여하기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한·일 또는 한·중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반듯이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미국은 아직도 한국경제규모의 20배가 넘는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인 동시에 수입액이 1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최대의 무역대국이고, 또 한국, 일본, 중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인 동시에 세 국가가 모두 막대한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이다. 만약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러한 미국에게 무역상 차별대우를 해서 경제적 불이익을 준다면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또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보완적인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정치, 군사, 외교면에서도 동반자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미 FTA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한·일 또는 한·중 FTA와는 비할 바 없는 가장 이상적인 경우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한·미 FTA는 실현 가능한 것일까? 필자는 그것이 결코 불가능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문제는 한국의 농업부문이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양국의 국내여론이 그것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농업 개방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그것을 피하려다 보니 FTA정책도 결국 별로 큰 실속도 없는 국가

들만을 상대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한국 정부가 WTO차원에서 요구하는 농업 개방보다 좀더 진전된 안을 만들어 미국에 접근한다면 미국도 동아시아에서 하나의 거대한 새로운 경제블럭이 대두하는 것보다는 농업부분에서 약간의 양보를 하더라도 한국과 FTA를 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의 이익을 지키려 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이 전략적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또 그 타이밍도 한·일 또는 한·중 FTA를 고려하고 있는 현 시점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그런 구상을 실천에 옮겨 볼 의지와 지도력을 과연 갖고 있는가 일 것이다. 지난 90년대 초 멕시코의 살리나스 대통령이 NAFTA에의 가입 의지를 밝혔을 때 그것이 가능하리라 믿었던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음을 우리는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FTA 정책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어 있지만 실상은 그것이 한국 무역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볼 수는 없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외개방이 이미 충분히 이루어진 나라에게는 FTA가 최우선 정책이 될 수 있고, 또 많은 나라와 FTA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 대상국가(또는 국가집단)의 경제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익도 커질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대외개방의 과정에 있는 나라는 세계를 상대로 해서 추진되는 대외개방 확대에 - 그것이 WTO의 협상결과에 의한 것이건 또는 일방적인 것이건 불문하고 - 무역정책의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할 것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 특정국가와 FTA를 맺어 WTO-plus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그것은 추가적 소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특정국가와의 FTA가 한국경제의 대외개방을 대신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물론 FTA의 대상국이 미국이나 EU와 같이 경제규모가 크고 시장제도가 잘 발달된 국가 또는 국가집단이라면 그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클 것이며 그것이 차선의 방법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와 같이 필요한 대외개방은 뒤로 미룬 채 한국경제에 충격이 적을 나라만 골라서 FTA대상국가로 삼는다면 그것은 안하는 것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그리 큰 경제적 소득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정부는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일방적 무역자유화 조치를 능동적으로 추구해 온 바 있다. 즉, 1983년과 1988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정부는 관세율개편 5개년 예시제를 강력히 추진한 결과 1985년만 해도 공산품에 대한 평균관세율이 20.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나 1994년에는 그것이 6.2%로 낮아졌고 그것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와서 부터는 한국의 무역정책이 수동적인 것으로 바뀌어 다자간 협상결과를 겨우 수용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무역정책이 실종된 듯한 느낌마저 주고 있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1994년 UR협상에서 최소시장접근 쿼터제를 얻어내는데 성공함으로써 쌀의 관세화를 유예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는 일찍이 쿼터제를 관세화로 전환하여 관세율을 낮춰나가고 있는 이웃나

라 일본과도 크게 대조적이다. 언제부터인지 한국에서는 농산물 수입개방을 방어하는 것이 통상정책의 목표가 되는 듯한 느낌까지도 주고 있는데 그런 상황 하에서 통상담당 관계자가 추구할 수 있는 FTA정책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필자약력]

南宗鉉

서울대학교 공학사 (1967)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경제학 박사 (1975)

미국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조교수 (1975-77)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연구원 (1977-81)

세계은행(IBRD) Senior Economist (1985-87)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소장(1994-96)

미국 Stanford University 경제정책연구소 초빙연구원 (1997)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1997-98)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원장 (2001-03)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교수 (1981-현재)

고려대학교 BK21 한국경제 교육·연구단 단장 (1999-현재)

세계경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1993-현재)

세계경제연구원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호

전화 : 551-3334/7, FAX : 551-3339

E-mail : igenet@igenet.com, <http://www.igenet.com>